

거창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

우리 도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2. 7월부터 「행정감사 결과」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다음 사항은 2011. 11. 8 ~ 11. 15까지 거창군에 대하여 실시한 도 종합감사 결과입니다.

I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1. 11. 8 ~ 11. 15(6일간)
- 대상기관 : 거창군
- 감 사 반 : 감사담당사무관 등 15명
- 감사내용 : 2009년 11월이후 현재까지 군정업무 전반

II. 감사 결과

- 행정상 조치 : 99건(시정 56, 주의 43)
 - 현지조치 : 58건(시정 33건, 주의 25건)
 - ※ 수범사례 발굴 : 독거노인 공동 생활공간(그룹홈) 조성 등 9건
- 신분상 조치 : 89명(경징계 3, 훈계 86)
- 주요 지적사항
 -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보조금 목적외 사용
 - 거창읍 경관림 조림사업 수의계약 부적정
 - ○○저류지 조성사업 관급자재(특허물품) 구매 부당 집행 등

Ⅲ. 수범사례

1. 독거노인 공동 생활공간(그룹홈) 조성

□ 추진배경

-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老老케어를 통하여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물론 불의의 사고시 신속한 구호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함

□ 사업개요

- 대 상 : 경로당이 없거나,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마을(개소당 5명정도 거주)
- 기 간 : 년중 추진
- 소요예산 : 100백만원

□ 추진상황

- 연차별 계획/실적

사 업 명	계	2011년	'12년	'13년	'14년이후
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(그룹홈)조성	계 획(28개소/510)	4(60)	6(100)	8(150)	10(200)
	실 적(2개소/30)	2(30)			

- 그간추진사항
 -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 및 지원조례제정(2010.11)
 -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선정지(하개명경로당) 보수공사 등(2011.05)
 -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거주자 입주(2011.07)
 - 입주(하개명), 시행(소정), 추진중(2개소)

□ 기대효과

-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평안과 상호의지를 위한 공동거주공간 제공
- 불의의 사고시 신속한 구호와 안정망 확충

2. 사회적 기업육성 시책추진

□ 추진배경

-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지역일자리공시제와 연계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회적기업 육성목표
 - 거창군(2014년도까지) : 사회적기업 20개육성/500명 일자리창출

□ 추진상황

- 2010. 8. 13 : 거창군 사회적기업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(경남도 군부최초)
- 2010. 8. 24 :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(10명)
- 2010. 10. 25 : 거창군 예비사회적기업 공모(육성위원회 개최 : 4개소 지정)
- 2010. 11. 1 : 부울경 사회적기업 우수사례발표(경남대표 : 거창군사례)
- 2011. 3. 3 : 지자체 재정지원 특화사업 공모선정(국비 60백만원)
 -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설치운영(연구원 2명 근무) : 2011. 5월 ~
- 2011. 4. 15 ~ 6. 22 :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및 읍·면 순회교육 실시
- 2011. 8. 12 ~ 10. 10 : 거창군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구축
- 2011. 11. ~ 2012. 1 :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용역 시행(사업비 30백만원)
 - 발굴된 모델을 대상으로 (예비)사회적기업 (지정)인증 추진계획
- (예비)사회적기업 (지정)인증 실적 : 8개소(인증1, 예비7)
 -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 사업비 공모(국·도비) 확보 지원 : 395백만원

□ 기대효과

-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제공 및 수익창출 잉여금의 복지시설 기부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3. 적극적 소통행정 추진으로 SSM(기업형 슈퍼마켓) 진입 차단

□ 추진배경

- 2011. 6. 28 롯데쇼핑(주)에서 거창읍 김천리 255-11전지 일원에 약 4,940m² 규모의 롯데마트거창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민원 유발
- 거창시장 상인을 비롯한 영세유통업자들이 롯데마트 입점저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에 돌입- 군민서명운동, 반대규탄대회 등

□ 추진상황

- 롯데마트신축 건축허가서 보완요청 : 2011. 7. 12
 - 관련부서 실무대책위원회 개최하여 검토의견 조율
- 자치단체장의 롯데마트사업본부 방문 설득
 - 방문일시 : 2011. 7. 13
 - 방 문 자 : 군수 및 관계부서 공무원
 - 방문결과 : 담당임원을 만나 군민의 정서를 전하고 입점자제 요청
- 대규모마트 등록규제를 위한 관련조례의 신속한 개정
 -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“거창군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”를 의원입법으로 기간 단축
 - 조례개정일 : 2011. 7. 28
-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범위 확대지정 ⇒ 전국최초
 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,000m로 확대
 - 확대지정 고시일 : 2011. 8. 22
- 롯데마트거창점 건축허가 자진취하 : 2011. 10. 31

□ 기대효과

-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보호
 - ⇒ 상호소통으로 이루어낸 갈등해소의 좋은 본보기
- 첨예한 대립이 상존했던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력을 발휘 ⇒ 군민중심 감동 행정 실현

4.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등 대군민 홍보

□ 추진배경

-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재난상황별 대처요령 및 군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시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강화
- 캠페인 및 각종 행사, 교육시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유도

□ 추진상황

- 『안전점검의 날』 추진 : 매월 4일 기준 캠페인, 교육등 추진
- 신문, 현수막, 홈페이지, 게시판, 리플렛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동
취약시기별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행동요령 대군민 홍보
- 『안전생활 길잡이』 전가구(27,000가구) 제작 및 배부
- 교육, 회의시 행정안전부 『이달의 재난』 재난홍보동영상 시청

□ 기대효과

- 재난예방 각종 방법과 재난시 취할 행동요령등을 군민에게 인식시킴
으로써 안전문화의 생활화 정착
- 각종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,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.

5. 소외계층 노후주택 전기 안전점검 · 정비

□ 추진배경

- 소외계층의 노후주택 전기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전기누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잔존하고 있어
-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의 소외계층 노후주택을 우선 점검·정비하여 재해발생 최소화 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1. 2. 21 ~ 4. 29
- 사업량 : 242가구
- 사업비 : 13,300천원
- 사업내용
 - 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
 - 안전한 전기 사용요령 홍보

□ 추진상황

- 가정용 분전함 3회로 242개의 14종 점검 및 교체
- 전기누전 및 선로노후화 상태점검

□ 기대효과

- 전기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
- 찾아가는 군정 실천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이미지 확립

6. 농촌형소화전, ABC소화기 사용 순회교육 및 점검 실시

□ 추진배경

-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지역의 자체 조기진화 능력 배양
- 농촌형소화전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를 통한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

□ 사업개요

- 농촌형소화전 및 ABC소화기 순회교육 실시
 - 기 간 : 2011. 6월 ~ 7월
 - 대 상 : 관내 12개읍면
 - 강 사 : 군 민방위담당 및 소방서 예방대응과
 - 내 용 : 화재 조기진압요령 및 소화전 사용방법 실습 등

□ 추진상황

- 농촌형소화전 및 ABC소화기 순회교육 실시
 - 참석인원 : 12개읍면 250여명
- 농촌형소화전 점검 및 정비
 - 신규설치 : 3개소/9,200천원
 - 보수 및 교체 : 41개소/16,928천원('11.11월말 사업완료)

□ 기대효과

- 고령화 농촌지역의 소화전 사용방법 숙달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
-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 경각심 고취 및 화재발생에 따른 대처요령 습득

7.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

□ 추진배경

-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의 영농인력 해소
-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구입부담 경감과 생산비 절감

□ 사업개요

- 사업장설치 :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
- 운영 주체 :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직영
- 사업규모(2011년 사업)
 - 사업비 : 1,250백만원(국비500,도비150,군비600))
 - 기반시설(보관창고) : 2동 946,38m²
 -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: 35종 103대

□ 추진상황

- 농기계 임대운영
 - 운영 : 년중 지속적 운영
 - 시간 : 09시~18시(농기계 재고 있을시 17시~익일18시)
 - 신청 : 사전 전화·인터넷 예약, 방문신청
 - 농기계 기종 및 대수 : 90종 259대
- 농기계 운영실적
 - 실적(2010년) : 1,570농가, 작업량 14,153km³
 - 실적(2011년) : 1,927농가, 작업량 23,125km³ (전년비157%증)

□ 기대효과

- 농작업 기계화로 영농편의 제공
-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

8. 체계적인 귀농정책 추진

□ 추진배경

-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의 안정 정착에 대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영농정착 의욕 고취
- 현실적 귀농과 이상적 전원생활과의 괴리 최소화로 U-Turn 방지
-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 필요

□ 사업개요

- 목적 : 체계적인 영농정착 지원 시스템 구축
- 귀농 전 및 귀농 후 지원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지원
 - 귀농전 지원 : 사전 농업농촌 체험을 위한 귀농인의 집 맞춤형 귀농마을 조성 운영, 농지 및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, 재배작목 소득분석 등 상담 및 안내
 - 귀농후 지원 : 안정 정착지원(영농정착금), 품목별 농업기술 지원(선배귀농인 및 전문가 멘토 연결), 생산물 판매지원(마케팅 및 급식센터 연계)

□ 추진상황

- 2010년 : 귀농인 작목별, 지역별 모임 활성화 - 14개작목, 1개 지역모임.
- 2011년 : 영농정착금지원 - 74농가, 370,000천원
- 2011. 2월 :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(3가구)
- 2011. 3월 :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카페운영: 회원수 770명
- 2011. 10월 : 귀농인 복덕방 운영(귀농카페 및 온비드 활용 자료제공)
- 2011. 10월 : 농업경영인과의 자매결연(1:1 멘토 결연)
- 2011. 10월 : 맞춤형 귀농마을 제1호 개소(영농체험 마을)
- 2011. 10월 : 귀농인 복덕방 운영 - 빈 집, 휴경지 등 임대차(매매) 조사, 카페 및 온비드 활용 정보 제공
- 2011. 10월 : 농업경영인회와 자매결연 및 1:1 멘토링 결성

□ 기대효과

- 귀농인의 체계적인 정착 유도로 안정화 기간 단축
- 지역사회 활성화 및 농업농촌의 영속성 유지

9. 보건진료원 순환보직 실시로 조직활성화 및 분위기 쇄신

□ 추진배경

○ 보건진료원 현황

총인원 (명)	현 근무지 근무년수별						숙식여부		비고
	25년이상	20~25년	15~19년	10~14년	5~9년	5년이하	숙식	출퇴근	
18	1	4	6	2	3	2	11	7	

- 동일 근무지내 장기근무(최고 25년이상)시 메널리즘에 젖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근무지 순환이동으로 조직활성화 및 분위기 쇄신 필요
- 거주업무 완화(관할 구역내에서 일상 생활권역으로 확대)로 인해 보건진료원들의 근무환경 변화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민서비스 유도
- 거리,순환주기 등 근무여건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진료원 자체 필요성 인식
- 진료원 개개인의 차별화된 의료지식을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 제공의 기회

□ 사업개요

- 보건진료소 근무 전 보건진료원 순환보직 실시
 - 진료원 및 진료소운영협의회의 심한 반발 등으로 시행치 못하게 전국적인 현실이었으나 순환보직이후 전국적으로 파급효과 수범사례
 - *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및 신문보도 사례 : “별첨”

□ 추진상황

- 2011. 3~4월 : 주민, 진료원, 진료소운영협의회 등 간담회 실시 7회
- 2011. 4월 : 전보기준안 마련
- 2011.5.02 : 전보발령

□ 기대효과

- 분위기 쇄신 및 조직의 활력 조성
- 장기근속으로 오래된 관행적 업무형태의 개선
- 전보후 신규 근무지에서 주민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
- 보건진료소와 주민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군민건강증진 기여

IV. 주요 지적사항

□ 직렬 불부합 인사(보직)관리 부적정

-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·훈련·근무경력·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함에도
- 행정 5급을 보건소장 직위에 발령, 보건 5급을 면장 직위에 발령, 행정 6급 직위에 세무 6급을 발령, 행정·사회복지 6급 직위에 행정 6급을 발령하는 등 직렬 불부합 인사 관리

□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부적정

-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, 위원회에서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해야 하는데도
- 근무성적위원회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전체순위와 평정점(안)을 정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켰으며, 징계처분 등 대상자에 대한 감점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근무성적평정시 감점처리 소홀

□ 징계처분 등의 말소지침 위반

-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근무성적평정, 승진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에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
-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승진임용 시에 참고자료로 작성하는 등 사실상 대상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결과 초래

□ 예비비 집행 부적정

-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
-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긴급재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

□ 0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보조금 목적외 사용

- 0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道로부터 10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, 군비 부담분을 예산확보하지 않은 채, 도비를 道の 승인없이 변경하여 타용도 집행

□ 에너지 관련법령 위반업체 행정조치 미이행

-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된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업체,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된 액화석유가스 부적합업소,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승강기 정기검사 기간경과 업체,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석유거래상황 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등에 대하여 이행촉구, 고발 등 행정조치 미이행

□ 자동차 정기검사·점검 위반차량 관리 부적정

- 자동차 검사·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000대의 차량에 대하여 명령서를 발급 하여 000대는 완료하였으나, 미이행한 000대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, 위반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, 고발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

□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위반업체 사후관리 부적정

-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, 자격증 미게시에 대하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유가보조금 549,670원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,
- 또한, 여객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, 운수종사자 미자격자 운행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과 함께 유가보조금 616,500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소홀

□ 관광농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

- 관광농원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농체험시설(기본시설)을 면적이 2,000㎡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100분의 20이상 이어야 함
- 00000관광농원은 영농체험시설(기본시설)인 밤나무 재배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관광농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

□ 농지전용 신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

-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와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, 농지전용신고한 자가 전용허가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
- 거창군 00면 00리 00번지(농업진흥지역)에 000이 농보전부담금이 100% 감면되는 농업용 창고건립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 00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등 농지전용 신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

□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

-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전체면적이 1,000㎡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
- 00읍, 00면 등 2개 읍면에서는 농지소유 규모가 1,000㎡를 초과하는 0명(0필지)에 대하여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

13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 허가 등 관리업무 소홀

- 거창군에서 개발·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00개공이 무허가로 사용되고, 0000개공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

□ 행동강령 위반 등 관련업무 소홀

- 거창군에서 00000공사 거창함양지사에 군비 등 4,469백만원을 지원하여 0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,
- 업무상 국외여행이 필요하면 거창군의 국외여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자인 00000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3,888천원의 경비를 부담하여 군청 직원 3명이 국외여행.

□ 위험근무수당 부당지급

-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함
- 거창군 000에서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여 40명에게 약 17,795천원을 부당하게 지급

□ 상·하수도 관련업무 추진소홀

- 상·하수도사업 종료 후에는 3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최장 1년 1개월 동안 정산보고를 지연하였고, 마을하수처리장 4개소를 준공하고도 건축물대장 미등재, 공유재산을 등기하지 않았으며,
- 거창정수장 유량계 3개를 1년 1회이상 정도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최장 2년 6개월 동안 미실시하였고, 공공하수도 4개소에 대한 사용 공고 후 관련내용을 도에 보고하지 않음.

□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 등 관련업무 소홀

-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면서 민간위탁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'09년부터 11,430천원을 집행하였으며,
-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서 0000, 000 등 19개 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행정조치 미이행

□ 공공사업 지목변경 미실시 등 관련업무 소홀

- 거창군 7개과에서 47개사업, 458필지, 875,011m²에 대한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용도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음.

□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-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, 격려금 집행시 최종 수요자 영수증 미징구와 50만원이상 접대성 경비 집행시 증빙서 미구비 및 각종 특산품·기념품 구입시 물품수불부를 미작성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격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, 경조사금품 한도액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, 시책·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,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·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 목적외의 경비로 집행

□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

-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, 유흥업종, 위생업종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사우나 등에는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
- 의무적 제한업종인 00000사우나와 주점(호프 등)에서 업무협의 등과 관련하여 심야시간 등에 사적용도 사용

□ 시설부대비(피복비) 부당 지급

- 시설부대비(피복비)는 자치단체의 명을 받은 공사감독관 및 일시적인 공사 현장 점검·감독한 자에 한해 지급하여야 함
-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는 사유로만 공사감독관 이외의 자인 과장, 담당주사, 담당자 등에게 피복비를 부당하게 구입·지급

□ 예산변경 등의 승인절차 미이행

- 세부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전에 예산의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임의로 시설비 낙찰차액을 사용하였으며,
- 시설비 낙찰차액을 본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비 낙찰차액을 부당하게 집행

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 미이행

-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
- 체납자 3명에게 분납 등의 경제적인 사유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적기에 취하지 않아 체납징수 소홀

□ 진료비 수납관리 및 지휘·감독 소홀

- 보건지소 수입(진료비)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, 징수한 수입금은 당일 또는 익일까지 거창군수가 발행한 납부서로 군금고(수납대행점)에 납입하여야 함에도
- 각 보건지소에서 현금 징수한 진료비를 141회, 1,490천원을 법정 납입일 보다 1일에서 최장 4일 지연 납입하여 보건지소의 수납관리 소홀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·감독 소홀

□ 거창읍 000 조림사업 수의계약 부적정

- 산림조합이 행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는 산림사업에서 제외되므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

- 거창군에서는 2011년 식목일 행사와 연계하여 거창읍 000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식목일 행사 준비 등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, 거창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도로변 가로수를 단순 식재하는 조경식재공사에 해당함에도 거창군산림조합과 56,660천원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
- 또한, 거창군에서 주관하는 식목일 행사 당일, 공무원·유관단체·주민들 400여명이 참여하여 300주를 식재하였음에도 식재비 금2,277천원을 정산·감액하지 않았음

□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부적정

-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건설기술용역의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있으나 (※ 2010.7.26. 동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추정가격 2천만원까지 1인 견적 가능)
- 거창군에서는 동 기간 중 1천만원 초과 17건(370,724천원)의 건설기술용역을 수의계약 추진하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데도 특정업체에게 용역예정금액 및 설계서류를 열람토록 하고 계약체결 시 타인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받아 사실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 부적정

□ 거창 수송대 보존관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

-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립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로 한정됨에도
- 거창군에서는 '거창 수송대 보존관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'을 추진하면서 상기 용역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산학협력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00대학교 산학협력단과 44백만원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부당 체결
- 또한,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내역서상 일반관리비 효율이 법정

요율을 초과하여 산출되고, 최종보고서가 부족하게 납품되었음에도 정산하지 않아 금2,388,500원을 과오지급

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부적정

-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
- 거창군에서 시행한 31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들이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사용 관련 서류를 면밀한 검토하여 정산하지 않음으로써, 감액조정해야 할 비용(안전유도 신호수가 필요없는 사업에 인부임 지급, 투입인원 및 동일 발주시기의 사업 등을 고려할 시 과도한 안전용품<안전모, 안전화 등>의 구입 등)을 정산치 않아 계약상대자들에게 도합 16,734천원을 과오 지급

□ 상하수도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

-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
- 거창군에서는 동일시기, 동일 권역의 상하수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건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할(11건→25건)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

□ 방법용 CCTV (무인교통감시장치) 구매·설치사업비 집행 부적정

- 방법용 CCTV(무인교통감시장치) 구매·설치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부적정한 시방서 작성 및 입찰참가자격을 지정하였고, 사업완료 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7,375천원에 대한 정산업무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위배

□ 거창일반산업단지내 지원시설 보조금 관리 부적정

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고,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는 때에는 정산서와 증빙자료,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
- 거창 일반산업단지내 지원시설 보조금을 관리·집행하면서 선금금 지급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, 보조금 교부시에 교부조건을 명시하면서 정확한 정산이 곤란한 통상적인 교부조건만을 지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 소홀

□ oo저류지 조성사업 관급자재(특허물품) 구매 등 부당 집행

- oo저류지 조성사업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입찰을 통하여 확정된 관급자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와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
-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임의로 특허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할 것을 결정하였고 또한 부당하게 대체·대용품이 없는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1인 수의계약 체결

□ 생활쓰레기 등 수집·운반 민간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

- '10년 생활쓰레기 등 수집·운반 민간 대행사업비를 정산과정에서 비목별 부당집행액을 모두 정상인 것처럼 부당 처리하여 거창군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 초래

□ 거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

-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(설계 V.E)는 설계완료 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설계완료 후 설계 V.E를 하였으며, 설계 V.E 결과 약 981백만원의 감액을 제안하였음에도 미반영

- 1km이상의 도로 신설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조기층 골재소요량(13,759m³)의 15%이상을 순환골재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미반영 등으로 1,018,680천원(설계 V.E 결과 절감 가능액 981,700천원 포함)이 과다계상

□ 00온천~00000골프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

- 도시(군)계획시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미이행.
- 가설건물은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등으로 11,794천원이 과다 계상

□ 국농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

- 도시(군)계획시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미이행.
- 세출예산의 변경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 및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·국장 또는 실·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4차례에 걸쳐 73,410천원의 타 사업 예산을 예산변경 절차 없이 집행

□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미이행

- 도시(군)계획시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00리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가 없이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

□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미인가

-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죽전근린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국제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 추진

□ 거창oo펜션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

- 건축법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해야 함에도
- 거창 oo펜션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공동 화장실, 공동 샤워실 등을 각 실별로 설치토록 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건축부서와 설계변경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건축허가사항 변경요청을 함으로써 공사 준공검사 이후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되는 등 업무추진 부적정

□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

- 학교급식지원 센터 건립지로 결정한 지역은 유통업무설비 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곳이며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는 공장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음
-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품가공공장에 해당됨에도 당해시설을 창고시설 용도로 하여 유통업무설비지구내에서 건립이 되도록 하였으며,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장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함에 따라 당해 시설 부지를 유통업무 설비지구에서 제척시키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

□ oo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행정절차 미 이행 및 업무처리 소홀

- 도시(군)계획시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웅양 정수장과 배수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후에 군관리계획결정은 하였으나, 실시계획 인가없이 보상 협의 및 공사
- 취수보 상단은 유속이 저하되어 별도의 호안바닥 보호공이 불필요하며, 집수흡관시공시 기초잡석 부설로 별도의 받침대설치가 불필요함에도 설계 반영하는 등 설계검토소홀로 공사비 약 8,522천원이 과다 반영